

민선7기 도정비전 뒷받침

전북도, 조직개편안 도의회에 제출

지방행정 환경 변화
신규 행정수요 선제 대응
현행 12국 57과 232팀서
1국 2과 9팀 추가로 신설
의결시 내년 1월 2일 공포

능동적인 기능 보강, 지방행정 환경 변화와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재편성 등이다.

기구·정원 조정내역은 본청 기구(현행) 12실국본부단 57관과단 232팀에서 → (개편안) 13실국본부단 59관과단 241팀으로 1국 2과 9팀을 신설, 직속기관중 소방기구는 완주소방서가 신설되어 3원 10소방사에서 3원 11소방서로 증가, 총정원은 3,885명에서 → 4,366명으로 481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경제산업국 → 일자리경제국과 혁신성장산업국으로 분리 ▲일자리경제국 내 일자리정책관(경제정책팀, 일자리취업지원팀, 청년정책팀, 창업지원팀, 소상공인팀), 투자금융과(기업유치팀, 외자유치팀, 금융산업지원팀, 금융타운 조성팀), 기업지원과(기업지원팀, 마케팅홍보지원팀, 인력양성팀, 노사협력팀), 사회적경제과(공동체정책팀, 사회적기업팀, 협동경제팀) 배치 ▲ 혁신성장산업국 내 혁신성장정책과

(신산업기획팀, 연구개발특구팀, 혁신도시팀), 주력산업과(자동차산업팀, 뿌리기계조선팀, 소프트웨어산업팀), 탄소융복합과(탄소정책팀, 탄소소재산업팀, 나노바이오산업팀), 신재생에너지과(에너지정책팀, 에너지지원팀, 에너지관리팀) 배치 ▲사회적경제과 신설 ▲신재생에너지과, 해양레저관광팀 신설 ▲캠버리호텔팀 신설 ▲소방안전조사팀, ▲행복정책기획팀, ▲가야백제팀, ▲공공디자인팀, ▲완주소방서 신설 ▲혁신기획팀 신설 ▲인구정책팀 신설 ▲안전감찰팀 신설 ▲해양수산부 업무 일일화를 위해 건설국에서 농축수산물품목으로 이관 ▲사회복지과 내 보훈복지팀 신설 ▲남북국제협력팀 신설 ▲전북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전북도 인재개발원으로 명칭 변경이다.

조직개편안은 제358회 정례회에서 의결 후 집행부로 이송되면, 「전라북도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1일 도청 접견실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도정 현안사업과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조사 면제 기대”

송하진 도지사, “정부 계획 반영 되도록 우리들 다할 것”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1일 “정부가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균형발전에 필요한 대형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지자체와 협의해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으로 안다”고 전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에 대해서는 “대 놓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국제공항의 물꼬를 터 주셔

서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웃음으로 화답한 대통령을 통해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다”고 말한 후 “다만 타 지역과의 민감한 현실에서 선언의 어려움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오늘 경제장관 회의 결과 전국적으로 예타면제 사업을 연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며 “이는 전북도의 논리가 반영된 것으로 도는 SOC뿐 아니라 전략산업까지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설

명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 구체적 대응방안도 “예타 면제 사업의 확실한 통과를 위해 7~8개의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전예타의 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찾고 관련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두 손을 잡고 다짐한 만큼 예타면제의 가능성을 높고 입구에 와 있다”며 “이제 정부 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우리의 땀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문제 해결 나서나?

민주당-전주시, 특별법 제정 약속

김승수 시장 국회 방문
홍영표 원내대표에 지원 건의

홍 원내대표 “국회·정부차원 특별법 제정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전주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관련사건 4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1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구을)와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등을 만나 ‘고형연료사용·제조시설에 대한 이전 및 휴폐업 보상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주시 팔복동같이 환경위해성이 높은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 등

을 담은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기로 약속함에 따라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은 지난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시에는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같은 해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업체는 자원순환시설이 아닌 고형연료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로 전주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결정을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부

결돼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전주시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시설 업체가 요청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부결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 ▲건축 증축허가 불허가 처분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연장불가 통보 등을 통해 모두 거부해왔다.

시는 향후에도 ▲특별법 제정 추진 ▲허가신청 연장 불허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고시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팔복동 폐기물처리시설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 내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팔복동 인근 시민들과 환경단체,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시민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이 팔복동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처음학교로’ 도내 사립유치원 참여율 12.42%

161곳 중 20곳에 불과... 서울 81.99% 등 지역차 커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도내 사립유치원 수가 전체 161곳 중 20곳에 불과하다. 이는 참여율이 12.42%다.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 처음학교로 등록 마감일인 지난날 31일 기준 전국 국공립·사립 유치원 총 8860곳 가운데 6037곳이 등록을 마쳤다고 1일 밝

혔다. 전체 참여율은 68.1%이다. 국공립유치원은 총 4801곳 가운데 4772곳이 참여 등록해 99.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사립유치원은 총 4220곳 가운데 1265곳이 참여해 30.9%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총 633곳의 사립유치원 가운데 519곳이 참여 의사를 밝혀 참여율이 81.99%를 나타

냈다. 사립유치원 수가 비교적 적은 세종·제주의 참여율은 100%를 기록했다. 그러나 부산과 충북의 참여율은 각각 5%, 5.88%에 불과했다. 대전과 경북도 각각 6.59%, 10.08%의 참여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 이처럼 처음학교로 참여율이 지역마다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장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축! 전주매일 창간

어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김제시의회!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